

2013년, 미디어 핫이슈 정리



글. 권수현
연합뉴스 국제뉴스1부
기자



2013년은 전 세계 언론계에서 그 어느 때보다 생존을 향한 몸부림이 치열했던 해로 기억될 듯 싶다. 나라 안팎에서는 신문 등 소위 ‘올드 미디어’로 불리는 전통적인 뉴스매체의 위기가 한층 더해졌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는 매체들의 활로 찾기도 가속화됐다. 또한 각국 정부의 보도 통제 압박이 심해지면서 언론 본연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활발했다. 중국 정부의 ‘외신 길들이기’ 수위가 높아지자 일부 매체는 지나친 눈치보기로 ‘내부 검열’ 의혹에 휩싸였다. 서구권에서도 가장 자유로운 사회로 꼽히던 영국에서는 정부가 국가 안보를 명분삼아 자국 정보기관 활동을 폭로한 매체를 압박해 보도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언론 독립성 ‘흔들’...각국 정부 압력 잇따라

스노든 사태와 영국 정부-가디언 갈등



미 국가안보국(NSA)의 정보활동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
(출처 : the guardian, "Edward Snowden, NSA files source:
'If they want to get you, in time they will',
2013년 6월 10일자)

올해는 세계 곳곳에서 정부 등 권력 기관이 언론 보도를 좌우하려는 시도가 잇따랐다. 지구촌을 ‘빅 브라더’ 논란으로 몰고간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감시활동 보도에 이은 영국 정부의 언론통제 논란이 대표적이다. 한때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으로 활동했던 에드워드 스노든은 NSA 하청업체 직원으로 일하며 기밀문서를 빼돌려 NSA의 대규모 감시활동을 폭로했다. NSA가 자국 주요 통신회사의 통화기록을 무차별 수집했다는 내용을 시작으로 영국 정보통신본부(GCHQ)와 함께 구글, 야후 등 인터넷 기업들로부터 이용자 정보를 몰래 빼낸 정황, 우방국 정상 전화 도청 등이 잇따라 드러나며 사태는 외교 분쟁으로까지 비화했다.

이른바 ‘스노든 파일’을 토대로 NSA 활동 내역을 폭로한 서방 언론은 첫 보도를 낸 영국 일간지 가디언을 비롯해 미국 주요 일간지인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 등 여러 곳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유독 가디언만 자국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영국 정부는 보도 초기부터 가디언이 자국 정보기관 활동을 보도해 국가 안보를 위협에 빠뜨렸다고 스노든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폐기하라고 압력을 넣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도 전면에서 나서 가디언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을 경고했고, 영국 하원은 가디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며 앨런 러스브리저 가디언 편집국장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영국 경찰 역시 가디언에 정부 기밀문서 유출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영국 경찰은 지난 8월 런던 히스로 공항에서 스노든 기밀문서를 특종으로 보도한 가디언지 기자 글렌 그린월드의 동성 파트너를 9시간 동안 구금하고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압수해 물

의를 빚기도 했다.

영국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언론계와 국제사회는 명백한 언론자유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유엔(UN)은 특별조사관을 파견해 그린월드 기자의 파트너 구금 사건을 조사하고 언론 통제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프랭크 라튀 유엔 언론자유 문제 특별조사관은 “국가기밀 보호를 이유로 언론 보도를 제한하거나 언론의 인권침해 고발 활동을 막아서는 안 된다. 인권침해에 맞서는 언론인과 미디어 종사자, 비밀정보 취급자 등은 권력 기관의 위협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신문협회(WAN-IFRA) 역시 영국 정부가 가디언에 NSA 관련 자료 폐기를 요구한 것은 언론자유 침해이며 이런 행동은 영국의 언론 자유 수호 및 확대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당사자인 가디언도 사실 등을 통해 자신들이 NSA 자료를 책임 있는 방식으로 다뤘다면서 관련 보도의 정당성을 호소했다. 러스브리지 가디언 편집국장은 지난 12월 3일 하원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스노든 보도를 계기로 정보수집을 둘러싼 논의가 촉발됐다”면서 보도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항변했다. 미국언론인협회(RCFP)와 AP통신, NYT, WP 등 미국 유력 언론들도 청문회에 앞서 영국 의회 서한을 보내 “가디언 보도는 정치인들을 화나게 했을 수는 있지만 대중에게는 중대한 문제를 알렸으며 이는 정확하고 깊이 있는 기사를 제공해야 할 언론인의 책무”라고 감쌌다.

中 정부, 서방 언론 통제 강화...블룸버그 ‘내부 검열’

중국에서는 서방 언론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도 통제가 수면위로 올라왔다. 중국 정부가 자국 언론매체는 물론 자국 주재 외신기자들을 암암리에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져 왔다. 중국에서는 이미 작년부터 원자바오 당시 총리 일가와 시진핑 현 총서기(당시 국가 부주석) 등 고위층의 축재 의혹을 보도한 블룸버그 뉴스와 NYT의 중문판 인터넷 사이트 접속이 끊긴 상태였다. 하지만 올해 들어 중국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나 매체에 대한 압박이 노골화하면서 중국 정부와 외국 언론사들 사이의 긴장이 더욱 고조됐다. 올해 1월에는 NYT 베이징 특파원의 비자 연장이 거부된 소식이 전해졌고 2월에는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가 NYT와 WP 등



미국의 감시활동을 폭로한 영국 가디언 지면
(출처 : 한겨레, 「이번엔 '가디언' 간부 조사까지」
영국 '스노든 보도' 탄압 점입가경, 2013년 8월 21일자)

미국 유력 언론 해킹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8월에는 월스트리트저널의 증권판 사이트가 차단됐다. 중국의 경제성장을 비교적 호의적으로 보도해왔다는 평가를 듣는 월스트리트저널이 2002년 인터넷 증권판을 개설한 이후 전체 사이트 접속이 차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11월에는 블룸버그에서 중국 비판적인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지 말라는 내부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NYT 보도를 통해 알려져 논란이 빚어졌다. 매튜 윈클러 편집국장이 중국 정부 고위층의 가족과 재계 유명인사의 유착관계 기사를 준비하던 자사 기자 4명에게 전화해 해당 내용을 더는 취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윈클러 편집국장은 이런 결정이 보도 통제가 심한 중국에서 최소한의 취재가 차단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기사 수위를 조절한 것이라고 내부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블룸버그뉴스의 소유주인 마이클 블룸버그 미국 뉴욕 시장은 중국 비판 기사를 삭제하거나 내보내지 않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며칠 뒤 2012년 시진핑 등 지도부와 가족들 재산 문제 탐사보도를 이끈 블룸버그 홍콩지사의 마이클 포사이드 기자가 정직 처분을 당한 사실이 NYT 등을 통해 재차 보도되면서 논란에 더욱 불이 붙었다. 포사이드가 내부의 보도제한 지침을 언론에 흘린 인물로 지목돼 이 같은 징계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블룸버그의 이런 ‘자기 검열’은 중국내 수익 감소와도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블룸버그가 지

난해 중국 고위층 재산문제를 보도한 뒤 중국기업에 대한 뉴스단말기 판매 수익이 크게 줄었고 이 때문에 중국 정부의 심기를 더는 거스르려 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중국 정부의 서방 언론에 대한 압박은 갈수록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12월 초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방중 때에는 의회 취재단의 일원으로 수행취재에 나선 블룸버그 기자가 중국 정부로부터 공식



중국 비판기사 보도금지 압력 행사 의혹을 받고 있는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
(출처 : The New York Times, 「Bloomberg Says News Service Did Not Kill Articles on China,」
2013년 11월 12일자)



2013년 12월 5일 베이징을 방문한 조 바이든(오른쪽, Joe Biden) 미국 부통령과 리커창(왼쪽, Li Keqiang) 중국 총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출처 : New York Post, 「Chinese eye expelling NY Times, Bloomberg reporters」, 2013년 12월 5일자)

기자회견장 취재를 금지당해 영국 정부가 유감을 표명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그 직 전에는 중국 당국이 베이징과 상하이의 블룸버그 사무실을 ‘불시조사’ 형식으로 방문한 사실도 드러났다. 중국 정부가 NYT와 블룸버그 소속 기자들의 비자 연장을 계속 거부하자 12월 5일 베이징을 방문한 조 바이든 부통령이 이의를 제기하며 이례적으로 중국 정부를 공개비판하기도 했다.

1982년 개혁개방 노선을 택한 중국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외국 언론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며 러브콜을 보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조금씩 외국 언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특히 2011년 중동권에서 대대적인 민주화 시위가 발발하자 자국 내 민심 동요를 우려해 온·오프라인 상의 통제 수위를 더 끌어올렸다. 중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해 말 시진핑 국가주석 취임 이후 강도가 더해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에 진출한 언론사들이 수익을 확대하면서 언론 본연의 기능을 동시에 추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지적하기도 했다.

일본 비밀보호법 제정…‘알 권리’ 침해 논란

또 다른 이웃 일본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 자체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일본 정부는 국가 안보 관련 주요 비밀정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특정비밀보호법 제정을



일본 비밀보호법 제정을 축하하며 박수를 치고 있는 자민당 의원들
(출처: 연합뉴스, 「일본 비밀보호법 제정」, 2013년 12월 7일자)



비밀보호법 통과에 반대하는 일본국민들의 반대시위 모습
(출처: 일본 레이버넷, 「主権者はわたしたち ~100%違憲の「秘密保護法」は認めない!」, 2013년 12월 8일자)

추진해왔다.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밀을 누설한 공무원에 대해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이다. 여기에 ‘특정 기밀’ 지정 권한을 행정기관장에게 주고 비밀 유출을 교사한 사람도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이론상 공무원으로부터 정보를 얻은 언론인이 처벌받을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셈이다. 이 때문에 비밀보호법이 언론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며 공직 사회의 내부 고발도 봉쇄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논란 속에 수년간 지지부진하던 법 제정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권의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이 올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10월 들어 법안이 심의 등 의회 통과 절차를 차례로 밟아가자 진보성향 신문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아사히, 도쿄, 마이니치, 요미우리 등 주요 일간지들은 사실을 통해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특히 아사히신문은 10월 30일자 지면에 총리 동정을 군데군데 먹칠해서 신는 파격을 보이기도 했다. 총리 동정 역시 ‘특정 기밀’에 해당한다며 비밀보호법안을 풍자한 것이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응답이 찬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각계각층의 반대 목소리도 잇따랐다. 일본 법대교수와 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 270명을 시작으로 일본 애니메이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을 비롯한 영화인 269명, 노벨상 수상자 등 저명 학자들이 결성한 ‘특정비밀보호법안 반대 학자 모임’ 소속 2천여 명 등이 잇따라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처럼 여론의 거센 반발에도 일본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 본회의에서도 12월 6일 표결에서 비밀보호법을 여유 있게 가결시켰다. 의회 과반을 점한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강행처리한 것이다. 법안에 반대해온 민주당은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에 대한 불신임안을 중의원에 제출하는 등 강수를 뒀으나 역시 여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런 양상을 두고 일본 안팎에서는 아베 정권이 본격적인 ‘힘의 정치’를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도통신은 아베 정권이 “정권출범 1년을 눈앞에 두고 국가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아베 노선’에 매진한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분석했다.

종이신문의 몰락?...올드미디어 ‘생존투쟁’ 이어져

‘전통 명가’ 워싱턴포스트 매각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8월 초 언론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소식이 태평양을 건너 전해졌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가 세계 최대 인터넷 소매업체 ‘아마존닷컴’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제프 베조스(49)에게 2억 5천만 달러에 매각됐다는 뉴스였다. 136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WP는 뉴욕타임스(NYT)와 더불어 자타공인 ‘미국 최고 신문’이라는 명성을 유지해온 신문으로, 특히 정치 부문에서는 독보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매체다. 미국 언론 역사상 최고의 특종으로 꼽히는



워싱턴포스트를 인수한 ‘아마존닷컴’ 최고경영자 제프 베조스(출처 : CNN Money, 「Jeff Bezos」, 2013년 8월 5일자)

1973년 워터게이트 사건 보도와 최근 국가안보국(NSA)의 기밀 감시프로그램 폭로 보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특종 기사를 만들어내며 풀리처상만 47개를 받은 WP의 매각에 전 세계 언론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WP의 주인이 바뀐 것은 종이신문 판매부수 감소와 광고실적 부진에 따른 경영난이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인터넷뉴스가 일상화된 언론환경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는데 실패한 것이다. 최근 7년간 계속 매출이 줄어드는 동안 WP가 마냥 손을 놓고만 있었던 것만은 아니다. 최근 수년간 정리해고를 단행했고 지난해에는 편집장까지 바꿨으며 올해 들어서는 워싱턴DC 백악관 인근에 있는 본사 사옥 매각을 추진하며 경영난을 해소하려 했다. 매각 직전에는 전력과 산업용 보일러 생산업체를 매입해 사업 다각화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주력사업인 종이신문 판매부수 급감에 따른 위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작년 WP의 손실은 5천 400만 달러(604억 1천만 원)였고, 매출은 5억 8천 200만 달러(6천 500억 원)로 7년 전보다 39%가 쪼그라들었다. 방송, 온라인, 교육 등 이른바 신수종 사업(편집자 주 : 기업의 미래 육성 사업)에서 영업이익을 내기는 했지만 종이신문의 손실이 이어지면서 부수업종이 주력업종을 먹여 살리는 상황이 계속됐다. 인터넷매체 등 신생 언론들이 계속 시장을 잠식하면서 광고마저 크게 줄었다. 올해 7월 야심차게 인터넷판 유료화를 단행해 일부 호평을 받기도 했지만 실적 회복에는 효과를 보지 못했고 결국 매각이라는 최후의 선택에 내몰렸다. WP는 인수 발표 당일인 8월 5일 인터넷판 기사에서 “지난 10여 년간 금융위기로 신문산업이 불황을 맞으면서 종이신문은 그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인터넷과 디지털기술의 부상으로 전통적 언론사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인정했다.

종이신문으로 대변되는 ‘올드 미디어’의 몰락은 어제오늘의 일도, WP만의 이야기도 아니다. 타임에 이어 미국 2위의 시사주간지로 평가되던 뉴스위크는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부터 가속화한 부수 급감과 부채 누적을 이겨내지 못하고 2010년 거저나 다름없는 1달러에 팔렸고 그 뒤에도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었다. 종이 잡지 발행은 작년 12월 31일 중단됐고 올해부터는 온라인 잡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인터넷판을 성공적으로 유료화했다는 평을 듣는 NYT도 올해 8월 자매지 보스턴글로브를 미국 프로야구팀 보스턴 레드삭스의 구단주 존 헨리에게 파는 등 부수적 자산을 매각하고 ‘선택과 집중’을 꾀하고 있다. 미국 미디어그룹 트리뷴도 올해 7월 매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로스앤젤레스타임스와 시카고트리뷴 등 계열사 신문부문 분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11월에는 경영난을 이유로 신문사 인력 700명을 감원하겠다고 밝혔다.

Award-winning journalism. Award-winning apps.
Try The Times Digital Experience for **just 99¢.**



Promotional offers for new subscribers only. Smartphone and tablet apps are not supported on all devices. Does not include e-reader editions. Premium Crosswords or The New York Times Crosswords apps. Prices shown are in U.S. dollars. Other restrictions apply.

Choose the subscription that's best for you.

	FIRST 4 WEEKS	EVERY WEEK THEREAFTER
☒ NYTIMES.COM + SMARTPHONE APPS Unlimited access to NYTimes.com and the NYTimes smartphone apps. See details	99¢	\$3.75
☐ NYTIMES.COM + TABLET APPS Unlimited access to NYTimes.com and the NYTimes tablet apps. See details	99¢	\$5.00
☐ ALL DIGITAL ACCESS Unlimited access to NYTimes.com and the NYTimes tablet and smartphone apps. See details	99¢	\$8.75

CONTINUE ▶

More subscriptions from The Times.



Home Delivery
Get 50% off 12 weeks, including unlimited access to NYTimes.com and more.



Digital Gift Subscriptions
Give unlimited access to NYTimes.com and more for as low as \$30.



Education Rates
See our special offers for educators and students.



Corporate Programs
Learn how companies can save with corporate digital subscriptions to The Times.

뉴욕타임즈 인터넷판 유료화 광고 안내(출처 : The New York Times 홈페이지[www.nytimes.com])

WP 인수한 아마존 베조스...이베이 창업자는 독립언론 창간

종이신문 시대를 풍미한 WP를 IT(정보기술)업계의 스타 베조스가 인수한 것은 다분히 상징적이다. 개인 자금으로 WP를 사들인 베조스는 1994년 시애틀에서 혈혈단신으로 창립한 아마존닷컴을 ‘공룡’으로 키운 입지전적 인물이다. 인터넷서점으로 출발한 아마존은 현재 전자제품, 의류, 가구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물품을 취급하며 세계 최대 온라인 소매업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또한 전자책 리더기인 ‘킨들’로 출판업계에서도 혁신을 몰고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자산 규모는 올해 현재 252억 달러로 포브스지 선정 세계 19위. 하버드비즈니스리뷰의 ‘2013년 세계 100대 CEO’ 순위에서는 고(故) 스티브 잡스에 이어 2위에 올랐다. 베조스 개인에 대해서는 드러난 사실이 많지 않다. WP를 소유해온 그레이엄 가문과 수년간 친분을 유지해왔고 지난해에는 워싱턴주에서 동성결혼 지원자금 250만 달러를 쾌척하는 등 진보·자유주의 성향을 가졌다는 정도만 알려져 있다.



새로운 독립언론사를 창간할 예정인 이베이 창업자 피에르 오미디아
(출처 : PressGazette, 「Threat to press freedom prompted eBay billionaire to
commit \$250 million to new journalism organisation」, 2013년 10월 17일자)

베조스가 WP의 구원투수로 자리 잡으며 신문업계의 '다크호스'가 될 수 있을지는 이제 전 세계 언론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종이신문의 위기가 남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아마존닷컴의 유통망과 킨들과 같은 미디어기기가 WP의 콘텐츠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다. 개인의 입맛에 맞춰 책이나 물건을 찾아주는 아마존의 고객성향 분석기법이 신문사업에서도 효과를 낼 지도 주목된다. 물론 IT와의 접합이 신문산업에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당장 WP의 사업적자를 해결하는 것부터 난관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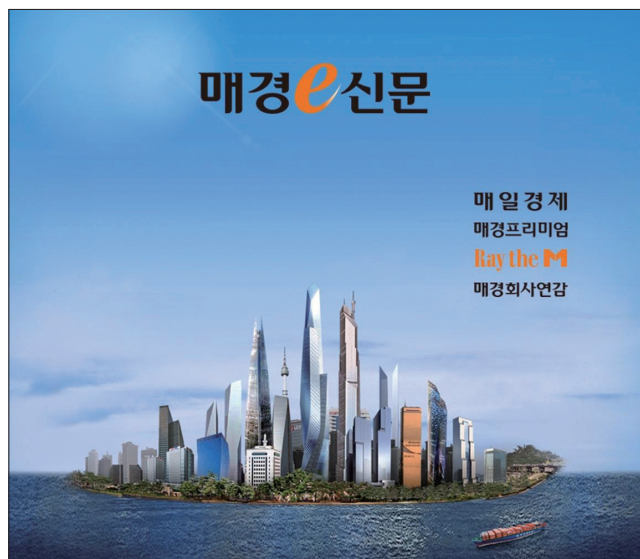
매출도 당분간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 광고로 급감하는 인쇄광고 매출을 메우기 어렵다는 점도 고민할 대목이다. 이런점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베조스의 WP 인수를 두고 비영리기관에 대한 투자에 가깝다고 평하기도 한다. 베조스는 자신도 9월 WP 인수 이후 이 신문과의 첫 인터뷰에서 자신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마법사'는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이 신문이 다시 날아오를 '활주로'를 제공하겠다면 "독자를 최우선 가치로 놓고 창의성을 발휘하고 인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온라인 경매사이트 이베이의 창업자인 피에르 오미디아(46)는 올해 10월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해 독립언론사를 창간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태생의 이란계 미국인인 오미디아는 1995년 창업한 이베이를 세계최대 온라인 경매업체로 성장시킨 또 다른 IT 거물이다. 85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해 포브스 조사에서 미국 개인부자 순위 47위, 세계 순위에서는 123위에 올라 있다. 자선투자기관 오미디아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등 사회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뒀던 그는 WP 인수도 검토했으나 새로운 미디어기업을 만드는 쪽으로 기울었다. 오미디아는 창간할 매체에는 에드워드 스노든의 제보를 토대로 가디언에서 NSA의 정보수집 행위를 최초로 보도한 글렌 그린월드 기자도 가세해 화제를 모았다. 아직 초기단계로 이 매체의 형태는 베일에 가려있지만 종이판이 없는 디지털 매체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탐사보도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류 독자를 위해 정치와 스포츠 등 일반 뉴스도 다룰 전망이다. 오미디아는 새 미디어 창간을 알리면서 "사회에서 언론의 역할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린월드 기자와 함께 언론인들이 진실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에 눈을 돌린 IT업계 인사는 이 뿐만이 아니다. 7월에는 스티브 잡스의 부인 로런 파월 잡스가 뉴스 스타트업(신생벤처기업) ‘오지 미디어’(Ozy Media)에 투자했다. 이 투자에는 실리콘밸리의 유명 엔젤투자가 론 콘웨이, 구글의 최고법률책임자 데이비드 드러먼드 등도 참여했다. 또 페이스북 공동창업자 크리스 휴즈는 진보 성향의 주간지 ‘더 뉴 리퍼블릭’(The New Republic)에 투자하고 뉴스자료를 모아주는 사이트 ‘업워시’(Upworthy)에도 자금지원을 했다. NYT는 실리콘밸리의 대규모 자원과 신선한 아이디어, 열정이 언론계로 이동하고 있다면서 이런 움직임이 단순한 자금 투자에 머무르지 않고 뉴스비즈니스의 혁신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서도 화두는 ‘생존’…채동욱 보도로 윤리논란도

한국 언론계의 현실도 WP가 매각된 미국과 별반 다르지 않다. 판매부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어온 신문업계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유료화에 나서면서 활로를 개척하고 있다. 매일경제가 9월 ‘매경e신문’으로 스타트를 끊었고 10월에는 한국경제가 초판 가판 발행을 중단하고 유료 디지털 서비스 ‘한경+(플러스)’를 내놓았다. 중앙일간지 가운데에는 조선일보가 11월 초 ‘프리미엄 조선’ 서비스로 뉴스 유료화에 들어갔다. 이밖에 내일신문과 전문지인 미디어오늘도 유료화 대열에 합류했다. 이들 언론사는 3천 원부터 1만 5천 원 가량의 월구독료를 받으면서 취재 뒷이야기나 집중취재, 명사인터뷰와 칼럼, 기업투자정보 등 깊이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겠다는 의도다.



2013년 9월 2일, 국내 언론사로는 최초로 온라인 유료 서비스를 런칭한 매경e신문 홈페이지 초기화면 캡처
(출처 : 매경e신문 홈페이지[digital.mk.co.kr])

하지만 신문사들의 유료 콘텐츠가 아직까지는 ‘독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이어서 온라인 독자들의 관심을 끌고 나아가 지갑을 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올해 상반기 신문업계를 달군 이슈인 조선·중앙일보의 연합뉴스 전재계약 해지도 뉴스 유료화와 맞물려 있다. 신문사들은 표면적으로는 전재로 인하를 내세웠지만 핵심 요구사항은 연합뉴스가 포털에 뉴스를 공급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온라인판 유료화로 활로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각 분야 기사를 포털을 통해 제공하는 연합뉴스가 걸림돌이 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연합뉴스에서는 속보 보도 중심인 반면 신문사들은 각자 ‘브랜드’를 바탕으로 심화 콘텐츠를 유료화한다는 전략이어서 목표지점 자체가 다르다고 항변하고 있다. 여기에 네이버가 4월 뉴스스탠드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개별 신문사 홈페이지로 유입되는 트래픽이 급락한 것도 신문사들의 위기의식을 부채질하며 뉴스 유료화에 잔결음을 치게 했다.

신문들이 이처럼 활로 찾기에 골몰하는 가운데 비영리 독립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함께 재벌총수 등의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탈세 의혹을 5월부터 차례로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이를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국 씨를 비롯해 이수영 OCI 회장, 최은영 한진해운 홀딩스 회장,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 등 한국인 180여 명의 탈세 내역을 공개, 대안언론의 가능성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조선일보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식 보도는 기존 매체들의 취재윤리와 언론 본연의 역할에 대해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다. 권력자의 부도덕에 대한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 보호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조선일보는 명확한 증거 없이 학적부나 주변인 진술 등 ‘정황’만을 가지고 단정적인 보도를 했다. 채 전 총장 등 당사자들 입장도 반영되지 않았고 보도과정에서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하지만 상당수 매체가 무분별하게 ‘의혹 보도’에 동참했으며 동아일보는 ‘채동욱 아버지 전상서’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런 상황은 정부와 특정 보수언론이 정국의 초점을 의도적으로 흐리려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씁쓸함을 남겼다.